

# 韓 수출 핵심 15대국 기술규제 5% ↑ 美·中 규제 강화, 베트남 2배 증가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 수출규제가 전년 대비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통보 기술규제는 누적 4337건으로 전년 대비 약 6% 증가했다. 이는 아프리카 등 개도국 통보가 늘어난 데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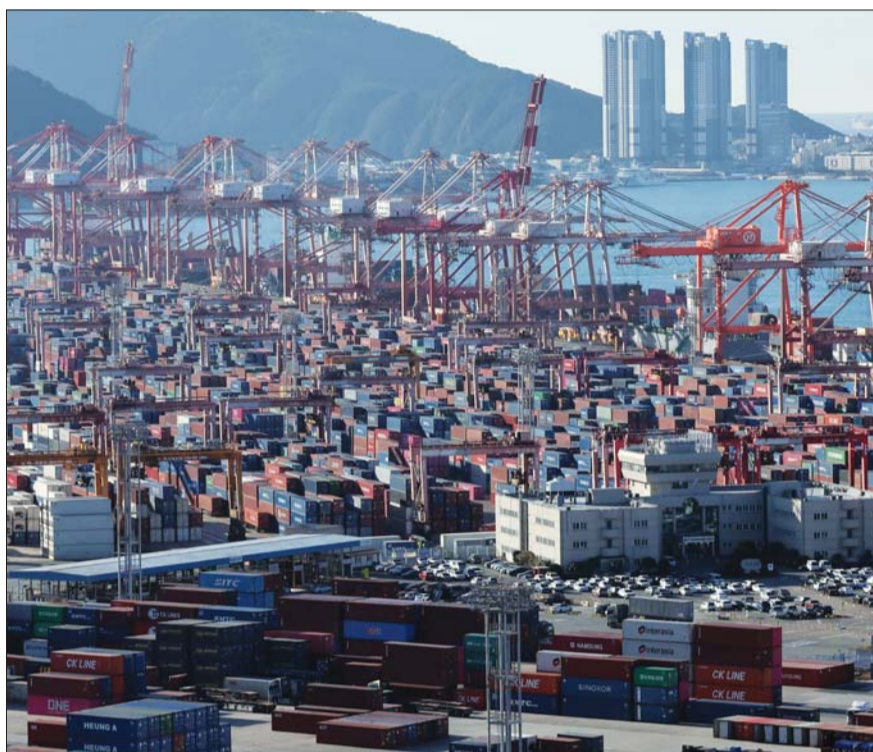
WTO 회원국은 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국가별로는 우간다(426건), 미국(419건), 탄자니아(326건)가 상위를 차지했고, 개도국 통보 비중은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21.8%), 농수산물 분야(21.2%), 화학세라믹 분야(15.9%) 순으로 많은 기술 규제가 통보됐다.

문제는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큰 나라 수출규제도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 5대 신흥국 등 15대 중점국은 1149건을 통보해 2023년 대비 5% 증가했다.

미국의 경우 에너지 효율 규제, 교통 안전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등 15대 중점국 중 여전히 기술규제 1위를 차지했고,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은 국가표준, 강제인증(CCC) 등을 제·개정



1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스시스

## 산업부 “산학연관 협력 수출 대응” WTO 기술규제, 2024년 약 6% 증가

## 개도국 비중 83%, 아프리카 상위권 美 에너지·교통규제 강화, 1위 유지 화학세라믹·식의약·전자 규제 집중

하는 등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191건을 통보해 미국에 이어 2위였다. 베트남의 수출규제도 자동차 관련 규제 등 66건을 통보하며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유럽연합(EU)과

인도는 각각 62건, 36건을 통보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15대 중점국이 주로 통보한 분야는 화학세라믹 분야(17.1%), 식의약품 분야(15.7%), 전기전자 분야(15.1%)로, 이 가운데 미국과 EU 등이 통보한 화학물질 관련 규제가 가장 많았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우리나라 수출 1,2위를 차지하는 중국, 미국 등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통보되고 있다”며 “이에 산학연관이 힘을 합쳐 대응해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고병원성 AI 확산... 가금농장 23건 발생

## 농식품부 지자체와 중수분 회의 개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 2건이 추가되면서 이번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검출 사례는 23건으로 늘었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9일 이후 가금류별 검출은 산란계 9건, 육용오리 9건, 토종닭 2건, 육용종계 2건, 산란종계 1건이다. 작년 10월 1건, 11월 4건, 12월 14건, 올해 1월 상순 4건 등이다.

농식품부는 “가금농장(23건)과 야생조류(27건)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본격적인 철새 도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모든 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식품부장관)는 이달 10일 충남 당진 소재 육용종계 농장(3만 3000마리·22번째)과 전북 부안 육용오리(2만 4000마리·23번째)에서 H5N1형



지난 6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경기 여주의 한 산란계 농장 인근에서 차량 방역이 실시되고 있다. /뉴스시스

고병원성 AI가 확인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수분은 전국 육용종계 농장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13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육용종계 중 사육규모가 큰 농장(5만 마리 이상 41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발생한 다슬 오리계열사에 대한 오리농장 및 도축장 검사 강화를 위해 전국 다슬 계열사 93곳의 오리농장을 대상으로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일제 정밀검사에 들어간다.

/세종=김연세 기자

# “폐자원에너지 정보 확인 한눈에”

## 환경공단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선포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13일부터 기존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 차세대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공식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새로운 시스템은 정부의 환경정책을 지원하며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폐자원 관련 정보를 보다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 업무를 전면 재설계했다. 고형연료제품(SRF), 바이오가스, 매립가스, 소각열 등 총 10종의 폐자원에너지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

도록 통합 플랫폼을 마련했다.

특히, 기존 시스템의 정보 분산과 비효율적인 데이터 처리 문제를 해결했으며, 최신 정보통신(IT) 기술을 접목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폐자원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스템은 폐자원의 생산, 회수, 이용, 판매, 공급 등 에너지 전환 과정 전반에 대한 분석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관련 기관과 기업은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기능이 도입돼 다양한 기관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로써 민관 협력을 통한 폐자원 재활용 및 에너지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

# 명절 보름 앞, 소·돼지·수산물 원산지 단속

## 농식품부-해수부

## 온라인 쇼핑몰 등 위반 중점 점검 전통시장·휴게소 수산물 단속 병행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선다. 특히 인터넷쇼핑몰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 제수용 수산물인 명태·조기 등에 대한 이력 점검도 실시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는 27일까지 이력관리 위반 우려가 높은 120개 축산업체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수입 소고기·돼지고기의 경우 이력관리가 미흡할 우려가 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단속 대상은 전국의 수입 소·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정육점 등),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영업장(식당 등) 및 온라인으로 축산물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히,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판매하는 통신판



한 마트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이 축산물 가공품에 표시된 원산지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뉴스시스

매영업장 및 이력제 위반이 의심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등을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입 소·돼지고기 취급 업체의 거래 내역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법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소·돼지고기의 수입산 여

부를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서 제품의 원산지 정보, 수입이력, 유통 경로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2회 이상 상습 위반업체의 경우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당국이 공표한다.

해양수산부도 27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품목은 명태, 조기, 전복, 옥돔 등 제수용 수산물을 비롯해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 사례가 많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활참돔, 활방어, 활암컷대게 등이다.

전통시장·마트 등 수산물 판매업체와 명절 방문이 증가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사전 집중단속에 나선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정부는 명절 기간 이외에도, 상시로 급식업체 등 수산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주요 업종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이행 현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자 지원 기업 모집

## 환경부 중소·중견기업 대상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오는 13일부터 내달 6일까지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2025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모집접수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중견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고, 여기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해 발행되는 금융상품이다. 이 증권은 중소·중견기업의 녹색 투자를 촉진하고 친환경 산업을 확산하기 위해 도입됐다.

해당 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됐으

며,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필요한 이자비용 일부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검토에 드는 외부 검토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자비용 지원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해 중소·중견기업 139개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기초로 총 3228억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참여 기업들은 평균 8600만원의 이자 비용 절감 효과를 누렸다.

/세종=김대환 기자